2024

공정미디어연대 세미나

2024. 10. 25(금) 14:30 프레스센터 18층

허위·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

| 주최 | 공정미디어연대 |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1.indd 1 2024. 10. 22. 오전 11:01

목 차

허위, 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나? · 5
허만섭 국립 강릉원주대 교수

한국 방송사들의 가짜뉴스 실태와 원인 · · · · · · · · · · · · · · · · 33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

허위 정보 확산의 조력자로 나서는 방송... 원인과 대책은? · · · · · · 41
이홍렬 前) YTN 보도국장

허위, 조작정보 해외 사례 중심으로 · · · · · · · · · · · · · · · · · · · 49
김문환 박사 前) 고려대 연구교수

법적 규제 및 처벌 규정 마련 · 55
김희원 변호사 경제사회변호사회

1.indd 2-3 2024. 10. 22. 오전 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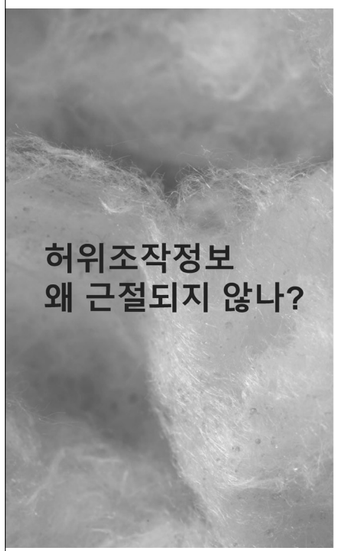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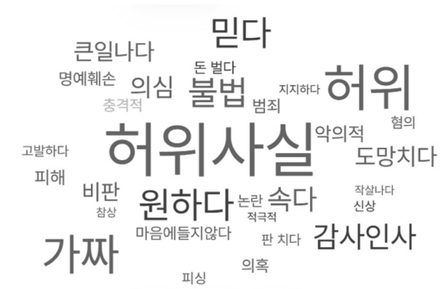
공정미디어연대 세미나

허위, 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나?

허만섭 국립 강릉원주대 교수

1.indd 4-5 2024. 10. 22. 오전 11:01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허위조작정보 담론
정의, 뉴스·SNS게시물, 확산구조
3. 실태
이슈 흐름, 인식, 통계, 유튜브 사례
4. 토론
대책, 반론
5. 참고문헌

1.indd 6-7
2024. 10. 22. 오전 11:01

1. 서론

- 국내외 허위조작정보 급증
- 일상적 지속적 문제
- 사회적 혼란과 피해 발생
- 정치, 기업, 연예 가짜뉴스 확산
- 딥페이크 등으로 다변화

진민정 (2024)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EU의 협업 프로젝트,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의 현황과 시사점. <Media 정책 리포트>, 1호, 1-17.

허위조작정보 문제점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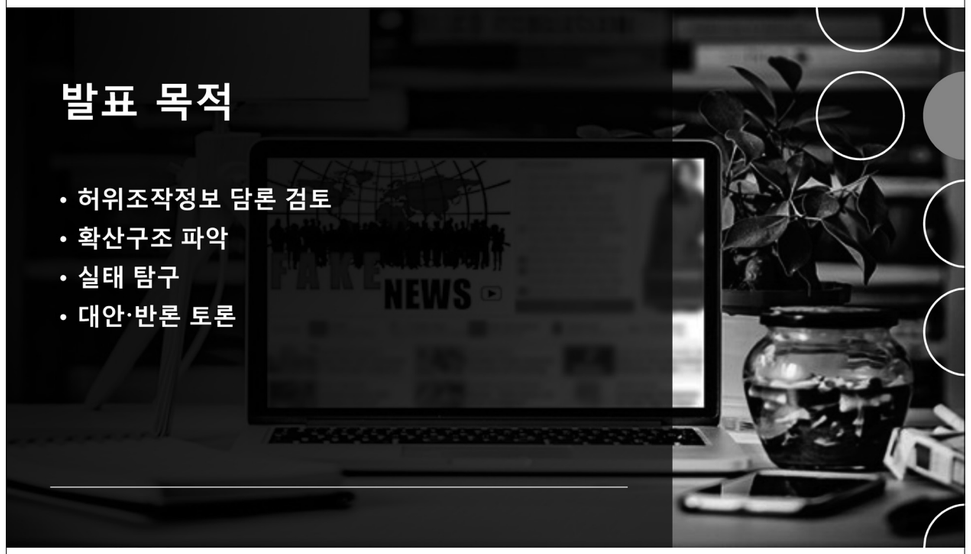
개인, 기업, 조직, 정부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 떨어뜨림

진실과 거짓 구분 힘들게 함…정보판단 어려워 짐

황치성 (2018). <세계는 왜 가짜 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했는가?> 북스타.

발표 목적

- 허위조작정보 담론 검토
- 확산구조 파악
- 실태 탐구
- 대안·반론 토론



1.indd 8-9 2024. 10. 22. 오전 11:07

2. 허위조작정보 담론

❖ 정의

허위정보(misinformation)

- 타인을 속이려는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정보
- 오보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만든 거짓 정보

가짜뉴스보다 허위조작정보

- 해외 기관·연구자
  "가짜뉴스(fake news)보다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가 더 적합한 용어"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의 일부"
- '내용의 허위' '고의성'이 핵심

Disinformation:
False information spread to deceive people

김민정 (2019).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미디어와 인격권>, 5권 8호, 43-82.

허위조작정보=세계적 위험

-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리스크 2024'
  "허위조작정보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 위험 요소"

Press release

Global Risks 2024: Disinformation tops Global Risks 2024 as environmental threats intensify

World Economic Forum (2024, January). Global Risks 2024: Disinformation tops global risks 2024 as environmental treats intensity. URL: https://url.kr/jgc883

뉴스·SNS게시물

- 세계경제포럼 2024년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는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단기위험"
  "AI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를 증폭"

This article is part of: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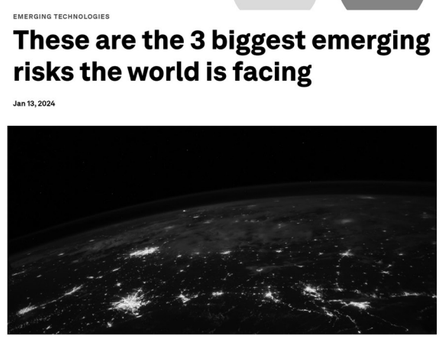
-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is the most severe short-term risk the world faces.**
- **AI is amplifying manipulated and distorted information that could destabilize societies.**
- **The World Economic Forum's Global Risks Report 2024 reveals interconnected risks flowing from the misuse of AI.**

World Economic Forum (2024, January). These are the 3 biggest emerging risks the world is facing. URL: https://url.kr/lfcmed

1.indd 10-11 2024. 10. 22. 오전 11:07

뉴스·SNS게시물

- 세계경제포럼 2024년
  “온라인에 허위조작정보가 만연”
  “세계인의 40%만이 뉴스를 신뢰”
  “기관의 공신력 무너지고 있음”
  “사회 분열 조장”



World Economic Forum (2024, January). These are the 3 biggest emerging risks the world is facing. URL: https://url.kr/lfc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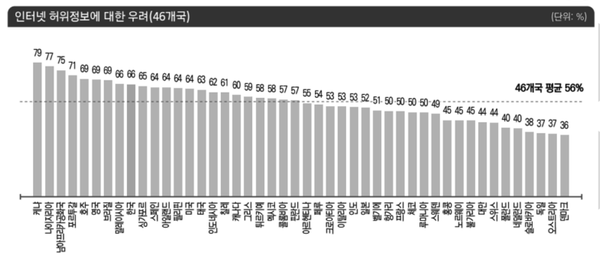
국내 허위조작정보 논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 조사**
  “응답자 66% 허위정보 우려”
  “정치 분야 허위정보 가장 많아”
  “응답자 62% 유튜브로 뉴스 소비”
  “유튜브 통한 허위정보 증가”

최진호-이현우 (2023). 허위정보 우려 상승 및 유튜브 뉴스 이용 증가: <Digital News Report 2023>으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이슈>, 9권 4호, 1-26.

국내 허위조작정보 논의

- **‘인터넷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에서 한국(66%)은 세계 평균(56%) 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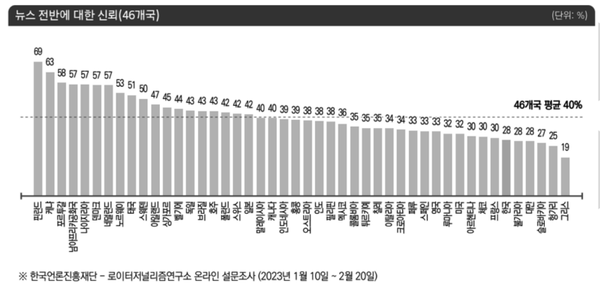


※ 한국언론진흥재단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 (2023년 1월 10일 ~ 2월 20일)

최진호-이현우 (2023). 허위정보 우려 상승 및 유튜브 뉴스 이용 증가: <Digital News Report 2023>으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이슈>, 9권 4호, 1-26.

국내 허위조작정보 논의

-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에서 한국(28%)은 세계 평균(40%) 보다 낮음**



※ 한국언론진흥재단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 (2023년 1월 10일 ~ 2월 20일)

최진호-이현우 (2023). 허위정보 우려 상승 및 유튜브 뉴스 이용 증가: <Digital News Report 2023>으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이슈>, 9권 4호, 1-26.

1.indd 12-13 2024. 10. 22. 오전 11:07

국내 허위조작정보 논의

- 동아시아연구원 2024년 조사
  “응답자 44.6% 6개월 내 가짜뉴스 봤다”
  “SNS에서 가짜뉴스 주로 접해”
  “응답자 58.6%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에 가짜 뉴스 규제해선 안 된다’에 부동의” (18.4% 동의)

이숙종 (2024).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시리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EAI워킹페이퍼>, 1-24.

확산구조

- 동아시아연구원 2024년 조사
  “허위정보 생산유포 책임자
  보수 유튜버 67.9%, 진보 유튜버 65.0%,
  보수 언론 56.4%, 진보 언론 55.4%,
  야당 정치인 54.8%, 여당 정치인 53.1%”

이숙종 (2024).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시리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EAI워킹페이퍼>, 1-24.

확산구조

- 한규섭 서울대 교수
  “국내 가짜 뉴스는 기사로 생산한 것이 정치권 및 타언론사에 재거론 되면서 증폭”
  “언론사도 오정보 생산·전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분석”

한규섭 (2024.1.31). 한국적 가짜뉴스. <EAI 가짜뉴스의 도전과 한국 민주주의 컨퍼런스>. URL: https://url.kr/6a4ot8

확산구조

- 박상운 고려대 박사
  “전통적 미디어 정보를 신뢰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접할 가능성 낮아”
  “뉴미디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접할 가능성 높아”

박상운 (2021). 누가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가? 제21대 총선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1권 14호,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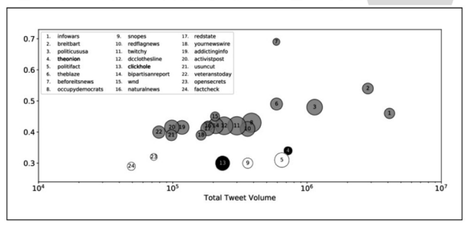
1.indd 14-15 2024. 10. 22. 오전 11:01

확산구조

❖봇(bot)

- 네트워크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 한 번 명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 행동 모방
- SNS 상 가짜뉴스 확산

봇이 만든 가짜 뉴스 기반 트윗(회색, 10^4~10^7 개)은 실제 뉴스 기반 트윗(검정색)보다 훨씬 많음



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확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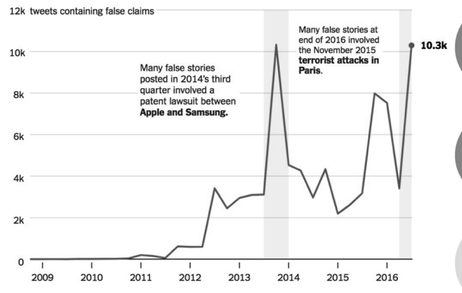
- 2016년 미국 대선 가짜뉴스 확산
  수천 개 러시아 봇(bot)과 가짜 프로필 계정 활동
  20개 가짜 뉴스에 871만개 공유 생성

- 에코 체임버 효과(echo chamber effect)
  밀폐된 공간에서 소리가 크게 울리듯, SNS가 특정 이념성향 유권자들에게 같은 성향 메시지를 다량 살포함으로써 이 유권자들의 이념적 편향을 증폭

Cartoon Movement. URL: https://www.cartoonmovement.com/cartoon/echo-chamber-effect

확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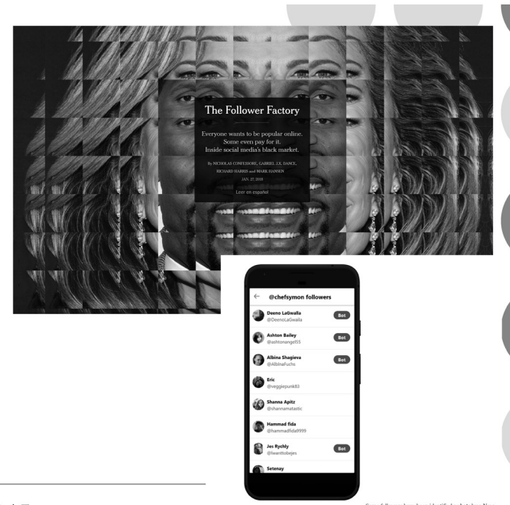
- 1만개 이상 트윗이 2014년 3/4분기 애플-삼성 특허소송 관련 가짜뉴스 전달
- 1만개 이상 트윗이 2016년말 파리 테러 관련 가짜뉴스 전달



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확산구조

- 뉴욕타임스 '팔로워 공장' 보도
  "취재한 인플루언서 SNS 계정 팔로워 중 절반은 봇이 만든 가짜 프로필 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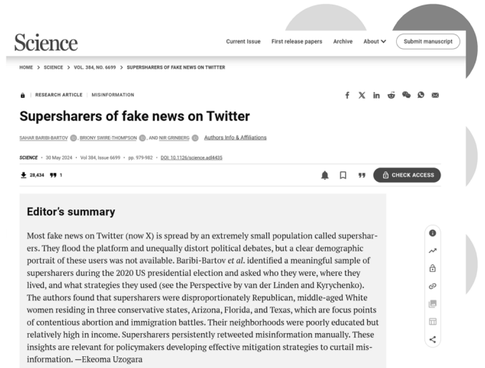
Some followers have been identified as bots by a New York Times investigation, including Ms. Rychly's stolen profile. Others appear to be human.

Andreoni, M. et al. (2018, 27 Jan.). The follower factory.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1/27/technology/social-media-bots.html

1.indd 16-17 2024. 10. 22. 오전 11:07

확산구조

- ‘사이언스’ 논문
  “1% 슈퍼공유자 2107명이
  2020년 미국 대선 때
  트위터 통해
  가짜뉴스의 80% 퍼뜨려”


Science

Current Issue First release papers Archive About Submit manuscript

HOME > SCIENCE > VOL. 384, NO. 6699 > SUPERSHARERS OF FAKE NEWS ON TWITTER

RESEARCH ARTICLE | MISINFORMATION

Supersharers of fake news on Twitter

SAHAR BARIBI-BARTOV, BRIONY SWIRE-THOMPSON, AND NIR GRINBERG Authors Info & Affiliations

SCIENCE • 30 May 2024 • Vol 384, Issue 6699 • pp. 979-982 • DOI: 10.1126/science.adk4435

28,434 1 CHECK ACCESS

Editor’s summary

Most fake news on Twitter (now X) is spread by an extremely small population called supersharers. They flood the platform and unequally distort political debates, but a clear demographic portrait of these users was not available. Baribi-Bartov *et al.* identified a meaningful sample of supersharers during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asked who they were, where they lived, and what strategies they used (see the Perspective by van der Linden and Kyrychenko). The authors found that supersharers were disproportionately Republican, middle-aged White women residing in three conservative states, Arizona, Florida, and Texas, which are focus points of contentious abortion and immigration battles. Their neighborhoods were poorly educated but relatively high in income. Supersharers persistently retweeted misinformation manually. These insights are relevant for policymakers developing effective mitigation strategies to curtail misinformation. —Ekeoma Uzogara

Baribi-Bartov, S. et al. (2024). Supersharers of fake news on Twitter. Science, 384(6699), 979-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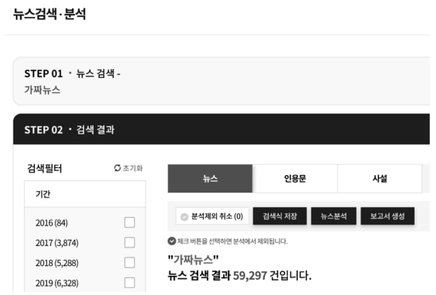
이슈 흐름

- 전체 가짜뉴스 관련 보도 중 대통령 포함 보도는 23,583건
- 기업 포함 보도(5,853건), 연예인 포함 보도(822건) 순
- 전체 가짜뉴스 관련 보도와의 상관계수는 대통령 포함 보도(0.79, 강한 양적 선형관계), 기업 포함 보도(0.49,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 연예인 포함 보도(0.19, 약한 양적 선형관계) 순
- 결론: 국내 가짜뉴스 이슈는 대통령 등 정치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

3. 실태

❖이슈 흐름

- 빅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 활용
- 2016년 1월 1일~2024년 9월 30일
  54개 국내 주요 매체에 보도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기사는 2,716건
  ‘가짜뉴스’ 관련 기사는 59,297건
- 보편적으로 쓰이는 ‘가짜뉴스’로 분석


뉴스검색·분석

STEP 01 · 뉴스 검색 -
가짜뉴스

STEP 02 · 검색 결과

검색필터 초기화

기간

2016 (84)
2017 (3,874)
2018 (5,288)
2019 (6,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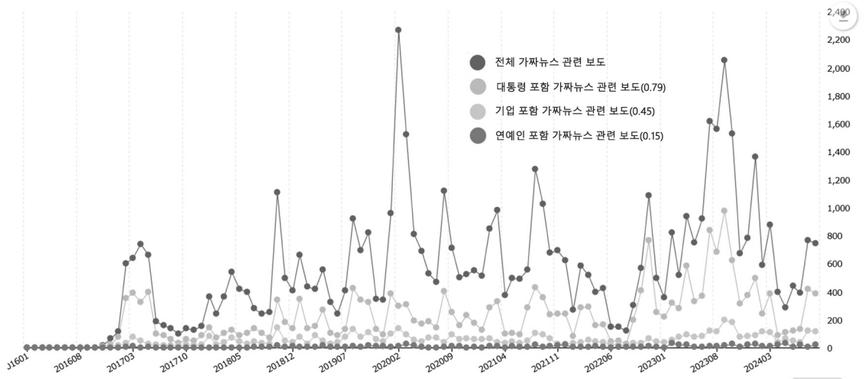
뉴스 인용문 사설

분석제외 취소 (0) 검색식 저장 뉴스분석 보고서 생성

체크 버튼을 선택하면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가짜뉴스"
뉴스 검색 결과 59,297 건입니다.

가짜뉴스 관련 보도량(상관계수)



1.indd 18-19 2024. 10. 22. 오전 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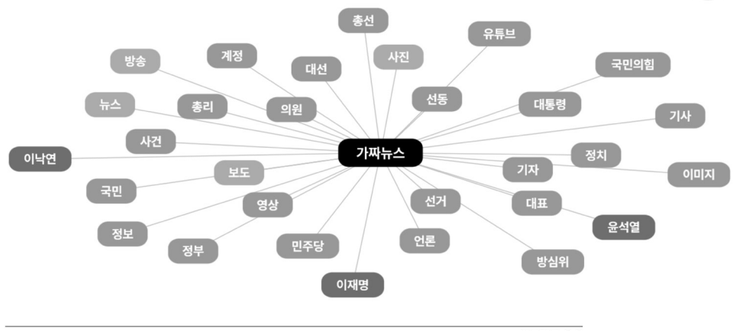
인식

- 빅데이터분석도구 썸트렌드 활용
- 가짜뉴스에 관한 인식 조사
- 국내 SNS 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무엇과 연관 지어 인식할까?
- 2023.10.1~2024.9.30 가짜뉴스 관련 인스타그램, 블로그, X(트위터), 커뮤니티 전체 게시물 조사
- 가짜뉴스 연관어 분석

빅데이터의 모든 것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SNS 가짜뉴스 연관어



썸트렌드 분석

순위	연관어	건수
1	언론	30,061
2	이재명	27,239
3	이낙연	26,892
4	뉴스	22,425
5	민주당	21,250
6	유튜브	19,842
7	대통령	17,563
8	대표	16,277
9	기사	15,604
10	영상	13,969
11	윤석열	13,537
12	방송	12,155
13	보도	11,956
14	정부	11,168
15	의원	10,571

- 결과, 가짜뉴스의 주된 연관어는 정치, 언론, 유튜브 관련 단어였음
- 연관어는 언론, 이재명, 이낙연, 뉴스, 민주당, 유튜브, 대통령, 대표, 기사, 영상, 윤석열, 방송, 보도, 정부, 의원 순이었음
- 기업, 연예인 관련 연관어는 순위에 없었음
- 결론: SNS 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정치, 언론, 유튜브와 연관 지어 인식했음

빅데이터의 모든 것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인식

-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관점과 언론표현자유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포용하는 관점이 있음
- 빅데이터분석도구 썸트렌드 활용
- 국내 SNS 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부정적으로 볼까 포용적으로 볼까?
- 2023.10.1~2024.9.30 가짜뉴스 관련 인스타그램, 블로그, X(트위터), 커뮤니티의 전체 게시물 조사
- SNS 게시물 내 가짜뉴스에 관한 부정적·긍정적·중립적 단어 분포 분석

빅데이터의 모든 것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1.indd 20-21 2024. 10. 22. 오전 11:07

순위	단어	긍·부정	건수
1	허위사실	부정	12,183
2	허위	부정	10,172
3	가짜	부정	8,470
4	원하다	긍정	6,791
5	믿다	긍정	6,502
6	불법	부정	6,257
7	감사인사	긍정	5,268
8	속다	부정	5,011
9	의심	부정	4,355
10	도망치다	부정	3,964
11	큰일나다	부정	3,882
12	비판	부정	3,587
13	악의적	부정	3,014
14	피해	부정	2,718
15	범죄	부정	2,489

- 결과, 부정적 단어는 허위사실, 허위, 가짜, 불법, 속다, 의심, 도망치다, 큰일나다, 비판, 악의적 순이었음
- 긍정적 단어는 원하다, 믿다, 감사인사, 돈 벌다(2,008), 지지하다(1,403), 신상(1,621) 등이었음
- 중립적 단어는 충격적(2,151) 등이었음

빅데이터의 모든 것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SNS 가짜뉴스 긍부정

썸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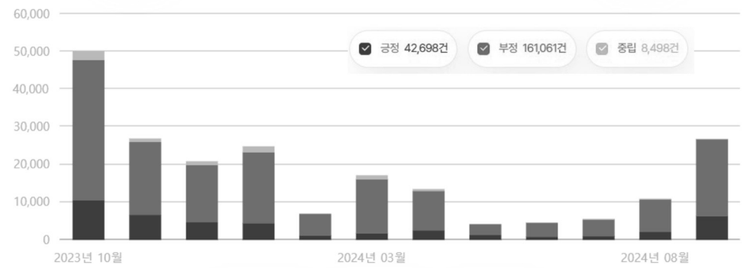
인식

- 가짜뉴스에 관한 SNS 게시물에서 부정적 단어의 비중은 75.9%(161,061건)였음
- 긍정적 단어는 20.1%(42,698건), 중립적 단어는 4.0%(8,498건)였음
- 결론: SNS 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포용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했음

빅데이터의 모든 것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SNS 가짜뉴스 긍부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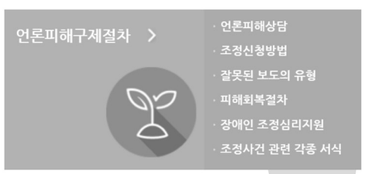


썸트렌드 분석

1.indd 22-23 2024. 10. 22. 오전 11:01

통계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는 보도로 인해 피해 느낀 사람·기관의 구제수단
- 조정 청구된 보도는 잠재적 오정보 후보
- 조정 성립된 보도는 오정보 개연성 상승
- 피청구 언론사가 소송 피하려 반론보도 조정 수용하는 경우도 많음



통계

- 언론중재위 자료 검토
- 30년(1993~2023년) 간 언론조정중재청구 건수, 조정성립 건수, 피해구제율 변화 조사
- 결과, <표>와 같이, 언론조정중재청구 건수, 조정성립 건수, 피해구제율 대체로 증가

<표> 언론조정중재청구 및 조정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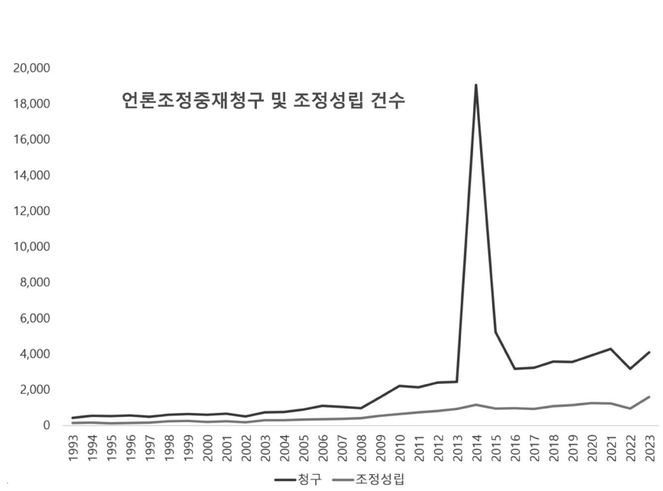
	청구	조정성립	구제율(%)
1993	423	132	56.2
1994	541	162	56.2
1995	528	111	52.1
1996	556	129	53.1
1997	490	161	61.3
1998	602	226	59.6
1999	641	244	59.8
2000	607	198	63.6
2001	659	229	62.3
2002	511	182	62.4
2003	724	287	68.0
2004	759	283	66.4
2005	883	334	62.4
2006	1,087	356	60.6
2007	1,043	359	64.8
2008	954	402	72.9
2009	1,573	538	73.9
2010	2,205	630	79.2
2011	2,124	725	71.3
2012	2,401	805	71.5
2013	2,433	916	77.6
2014	19,048	1156	88.7
2015	5,227	940	77.9
2016	3,170	961	72.3
2017	3,230	915	73.7
2018	3,562	1081	71.4
2019	3,544	1129	69.2
2020	3,924	1245	67.8
2021	4,278	1221	62.7
2022	3,175	949	67.6
2023	4,085	1599	74.1

통계

- 조정중재청구 423건(1993) → 4085건(2023)
- 조정성립 132건(1993) → 1599건(2023)
- 구제율 56.2%(1993) → 74.1%(2023)
- 결론: 사람·기관에 피해 주는 언론 오정보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표> 언론조정중재청구 및 조정성립

	청구	조정성립	구제율(%)
1993	423	132	56.2
1994	541	162	56.2
1995	528	111	52.1
1996	556	129	53.1
1997	490	161	61.3
1998	602	226	59.6
1999	641	244	59.8
2000	607	198	63.6
2001	659	229	62.3
2002	511	182	62.4
2003	724	287	68.0
2004	759	283	66.4
2005	883	334	62.4
2006	1,087	356	60.6
2007	1,043	359	64.8
2008	954	402	72.9
2009	1,573	538	73.9
2010	2,205	630	79.2
2011	2,124	725	71.3
2012	2,401	805	71.5
2013	2,433	916	77.6
2014	19,048	1156	88.7
2015	5,227	940	77.9
2016	3,170	961	72.3
2017	3,230	915	73.7
2018	3,562	1081	71.4
2019	3,544	1129	69.2
2020	3,924	1245	67.8
2021	4,278	1221	62.7
2022	3,175	949	67.6
2023	4,085	1599	74.1



1.indd 24-25 2024. 10. 22. 오전 11:01

유튜브 사례

❖유튜브 ‘허위정보 생산유포 책임’ 논란
❖ 대통령 ‘가짜뉴스 이슈 중심’ 논란

❖자극적 유튜브 썸네일
→과장·오정보 多 가능성
❖‘최초·충격·진실·단독’
자극적 썸네일 ‘클리셰’(도식적 표현)

탐구

‘최초·충격·진실·단독’ 썸네일
유튜브 영상은 현 대통령을
주로 어떻게 다루는가?

구글 코랩

❖ Google Colab
❖ 유튜브API키 입력
❖ 최초, 충격, 진실, 혹은 단독을 포함하고 윤석열을 포함하는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수집하는 텍스트 파일 만들기
❖ 319개 유튜브 썸네일 담은 텍스트 파일 생성

구글 콘솔

❖ Google Cloud Console
❖ YouTube Data API v3 검색
❖ 유튜브API키 생성

최초·충격·진실·단독 유튜브 영상 내용은?

❖ 윤석열 관련
최초·충격·진실·단독 유튜브 영상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
‘편향된 관점’ 포함

[음성파일 최초공개] 윤석열 검사가 3번 봐줬다? 기업가와 검사의 검은 유착 의혹
단독!! 윤석열·김건희 만나 조언...논란의 천공 스승 만나보니
[단독] 윤석열 처가 회사 땅값 뻥튀기 사실이었다...무더기 오류
윤석열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바이든...진실의 공방으로
윤석열 장모의 충격 녹취! “돈만 가져와!”
충격! 윤석열 육성파일 공개! “일개 검사 시절부터 이명박-노무현 등 대통령들 머리 위에서 놀았다!”
윤석열 일가 사기사건 진실은? 당사자 OOO 최초 출연
[단독] 쥴리 의혹 실명 증언 OOO “윤석열 장모도 만났다”
[단독] “기업 협찬 대가성 입증”...윤석열 부인 곧 소환
충격~ 예수를 모독한 천공...그의 제자 윤석열이 말하는 예수는?
[단독] “윤석열한테 가서 작은아버지 봐 달라고 해”...검사와 기업가의 수사 봐주기 유착 의혹 증폭
[단독] 윤석열 장모 또 농지법 위반 의혹
[단독취재] 윤석열 멘토 심도사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장모 재구속? 양평 특혜 의혹 진실은?
역대급 진실 터지자 현장 아수라장...윤석열 주치의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 폭로
폭로 “검찰, 윤석열 처-장모 관련 2019년 댓글부터 수사중”
폭로! ‘신천지’는 윤석열의 빨XX이다!...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무속인이 예견하는 충격 미래 / 윤석열 대통령 신점
[단독] 새 녹취록...윤석열 부친 집 매입, 김만배 누나의 수상한 취업
최초공개 [마키아벨리] 극우까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공개적으로 요구!
최초공개 [역전의 용사들] 윤석열 정권 지지율은 바닥을 찢고 지하로! 보수언론조차 칼 들기 시작!
[충격] "윤석열" 대통령은 간신배만 있고 끝나가는 형국이다
헌정사 최초 제1야당 구속영장..."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단독] 윤석열, 이번엔 블록체인과 코딩을 속성으로 배웠다네요
윤석열 처가의 쩐의 전쟁, 션라이즈 게이트 제보자의 충격 진술
최초 "윤석열 탄핵" 거론한 민주당 의원 "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가?"
[충격] "윤석열" 대통령의 폭군 정치로 극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모든 게 최초! 최악! 정권이다 #거부권 #특검법 #채상병 #김건희 #윤석열 #탄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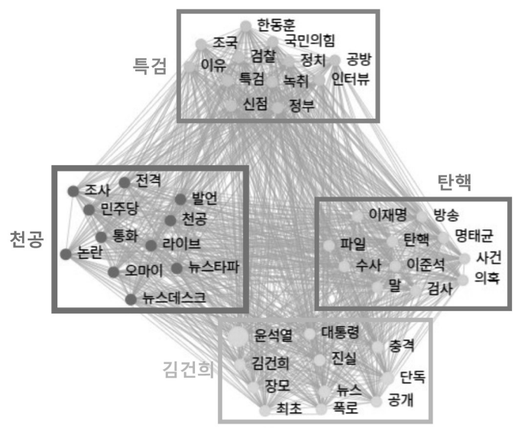
1.indd 26-27 2024. 10. 22. 오전 11:07

CONCOR분석

❖TEXTOM에서 텍스트파일 불용단어 전처리
주제 군집 추출하는 CONCOR분석 수행

최초·충격·진실·단독
유튜브 영상 주제는?

- ❖ CONCOR분석 결과
- ❖ 윤석열 관련 319개
  최초·충격·진실·단독
  유튜브 영상은
  김건희 천공 특검 탄핵
  4개 주제군(群) 집중
- ❖ 정책 주제 없음



4. 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책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 운영 중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허위조작정보 삭제 않는 플랫폼에 벌금 부과

European Commission. (2018).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
URL: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tackling-online-disinformation

4. 토론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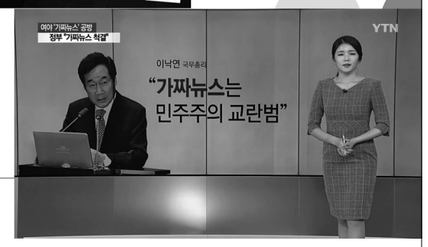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2018년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

✓이낙연 총리 2018년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이낙연 민주당 대표 2021년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성언론도 포함"

✓이낙연 민주당 대표 2021년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 아냐"



박두홍 (2021.2.10). 이낙연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성언론도 포함".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2101039001

1.indd 28-29 2024. 10. 22. 오전 11:01

토론

❖대책

• 알고리즘(필터링 시스템) 및 인공지능 통한 허위조작정보 감지·차단

✓ 유럽 '디지털미디어관측소' 설치(오른쪽 지도)

European Commission. (2018).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 URL: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tackling-online-disinformation

토론

❖대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디지털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역량 함

• 기사 수정·삭제 이력 공개

• 링크로 전달되는 정보의 출처 표기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기술적 방안 검토와 정책적 제안. <미디어정책리포트>, 6호.

토론

❖반론

• 정치적 도구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함

• 표현·언론 자유 침해

✓특정기관이 정보 진위를 판별함으로써 다양한 견해 밝힐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함

아주경제

중국 산업 재테크 경제 정치 사회

홍영표 "가짜 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침해해선 결코 안 돼"

정은령 기자 | 입력 2018-10-17 11:38

민주당 가짜뉴스특위, 첫 번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Graves, L. (2016).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토론

❖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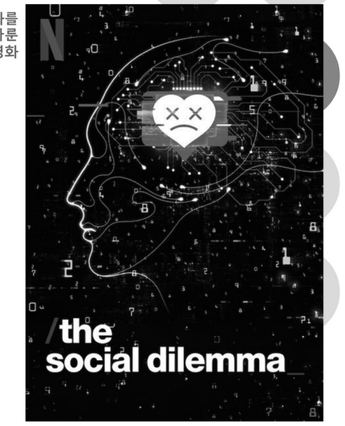
• SNS 플랫폼 권력 비대화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자율 규제하면 정보검열의 주체가 됨

• 규제 무용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규제의 실질적 효과가 없음

SNS의 권력화를 다룬 넷플릭스 영화



Vaidhyanathan, S. (2018). *Antisocial Media: How Facebook Disconnects Us and Undermines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1.indd 30-31 2024. 10. 22. 오전 11:01

5. 참고문헌

김민정 (2019).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미디어와 인격권>, 5권 8호, 43-82.

박두홍 (2021.2.10). 이낙연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성언론도 포함".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2101039001**

박상운 (2021). 누가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가? 제21대 총선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1권 14호, 5-29.

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숙종 (2024).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시리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EAI워킹페이퍼>, 1-24.

진민정 (2024)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EU의 협업 프로젝트,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의 현황과 시사점. <Media 정책 리포트>, 1호, 1-17.

최진호·이현우 (2023). 허위정보 우려 상승 및 유튜브 뉴스 이용 증가: <Digital News Report 2023>으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이슈>, 9권 4호, 1-26.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기술적 방안 검토와 정책적 제안. <미디어정책리포트>, 6호.

한규섭 (2024.1.31). 한국적 가짜뉴스. <EAI 가짜뉴스의 도전과 한국 민주주의 컨퍼런스>. URL: https://url.kr/6a4ot8

황치성 (2018). <세계는 왜 가짜 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했는가?> 북스타.

참고문헌

Andreoni, M. et al. (2018, 27 Jan.). The follower factory.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1/27/technology/social-media-bots.ht

Baribi-Bartov, S. et al. (2024). Supersharers of fake news on Twitter. Science, 384(6699), 979-982.

European Commission. (2018).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 URL: 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tackling-online-disinformation

Graves, L. (2016).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Vaidhyanathan, S. (2018). *Antisocial Media: How Facebook disconnects us and undermines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Economic Forum (2024, Jan.). Global Risks 2024: Disinformation tops global risks 2024 as environmental treats intensity. URL: https://url.kr/jgc883

World Economic Forum (2024, Jan.). These are the 3 biggest emerging risks the world is facing. URL: https://url.kr/lfcmed

2024
공정미디어연대 세미나

한국 방송사들의 가짜뉴스 실태와 원인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

1.indd 32-33 2024. 10. 22. 오전 11:01

한국 방송사들의 가짜뉴스 실태와 원인

1. 왜곡 조작 보도

먼저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를 사례로 우리나라 방송들이 어떤 왜곡 조작 보도를 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무근인 주가조작 수익설

2024년 1월 12일 YTN 이브닝뉴스는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전날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 도표에 있는 내용으로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러 방송들이 '23억 원 수익'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 보도했습니다.

2월 1일 YTN 뉴스나이트, 2월 15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2월 25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월 1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3월 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등에서 연이어 김건희 여사 모녀의 거액 수익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무혐의 판결 사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익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중 앞부분만 떼어내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의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2) 여야 공천과정 왜곡 보도

3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가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는데도 진행자 김종배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3월 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자신이 참여한 민주당 위성정당은 '정치개혁 취지를 지키는 개혁연합'이라고 미화한 반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병립형 퇴행을 위한 정당'이라고 폄하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박은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3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출연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민의힘

1.indd 34-35 2024. 10. 22. 오전 11:01

공천을 비판하면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준일은 김 전 장관이 2회 기소되어 1건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1건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YTN 뉴스N뉴스에 이른바 '보수 참칭' 패널 장성철이 출연해 국민의힘 유영하 후보자 공천에 대해 "선거운동 과정 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반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3) 여론조사 결과 비틀기

3월 21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는 약 일주일 간격을 둔 두 여론조사가 각각 전화면접과 ARS 조사로 조사방법이 다른데도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의 우위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1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은 부산 북갑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이라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도 "상당히 앞선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닷새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나온 여론조사'라고 거짓 설명했습니다.

(4) 유세 인파 늘였다 줄였다

정당별로 선거유세장 인파를 많이 보여주고 적게 보여주는 후진국형 보도도 자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MBC 뉴스데스크는 3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세를 보도하면서 단 한 번의 부감샷 없이 근접 촬영 화면으로 몰려든 인파가 적게 보이게 편집한 반면, 3월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세 소식에는 옥상에서 촬영한 부감샷으로 유세 인파가 최대한 화면에 담기도록 편집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3월 4일, 국민의힘 유세) (3월 6일, 민주당 유세)

같은 날 같은 장소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세를 MBC와 SBS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비교하면 MBC의 편파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 23일) SBS 8뉴스 (2월 23일)

(4) MBC의 '대파 가격' 공세

MBC는 선거운동기간 막판에 '대파 가격 논란'으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물가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틀 뒤 MBC 뉴스데스크에서 임현주 기자가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라는 부분을 방송했습니다. 리포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를 실제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농협유통 대표) "원래 가격은 1700원 정도 해야 하는데, 저희가 875원에"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농협유통 대표) "(농협중앙)회장님께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라고 하셔서"
농협중앙회장) "원래는 2550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창 비쌀 때에는 3900원까지"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 대화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게 아니라, 농산물 공급을 늘려 소비자 물가가 어느 선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해석하는 게 옳았습니다.

2. 왜곡 조작의 원인

적지 않은 우리나라 기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왜곡 조작 보도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특정 정파의 이익에 기여할 경우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1.indd 36-37 2024. 10. 22. 오전 11:01

(1) 김대업 병풍 보도

MBC는 16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라는 김대업의 거짓말을 보도했습니다. 2002년 7월 31일, 전직 의정 부사관 김대업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인옥 여사가 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한인옥 여사를 만났다는 등 3류 소설 같은 주장이었지만, 이날부터 MBC는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대업과 민주당이 두 달 전부터 관련 주장을 계속했지만, 5년 전 대선 때 이미 써먹었던 수법이라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MBC가 무려 한 달간 매일 같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니까, 그제서야 국민들은 무슨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선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MBC에서는 전국언론노조 초대 위원장이었던 최문순 부장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MBC는 노영방송의 길을 걸었습니다.

(2) 광란의 광우병 보도

5년 뒤 17대 대선이 다가오자 MBC는 BBK 주가조작 사범 김경준이 주장한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을 집중보도했습니다. 김경준의 주장은 나중에 대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됐지만, 그의 거짓말을 반복해 유포했던 MBC 기자들은 아무도 처벌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대선 개입에 실패한 MBC 기자와 PD들은 그 뒤 강도를 높여 직접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였습니다. PD수첩은 미국에 광우병 걸린 소들이 많고 그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출범한 지 일 년도 안 된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렸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훗날 MBC에서 영화를 누렸습니다. 사회자 송일준은 광주MBC 사장이 됐습니다. CP였던 조능희는 MBC 기획편성본부장을 거쳐 MBC플러스 사장이 돼 거의 6년간 임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걸로도 만족 못 해 조능희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조능희는 국회에서 "PD수첩 덕분에 국민이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다"는 번번한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3) 탈북작가 성폭행 오보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두 차례 '탈북작가 장진성 씨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은 다른 방송사들에도 제보했지만 증거를 가져오라며 거절당했는데 MBC만 자기 말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그걸 무슨 자랑처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장진성 작가가 MBC 홍신영 기자에게 무슨 증거로 방송을 했느냐고 따지자, '우리는 증거보다 방송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장 작가는 말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았으니,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보자 여성은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MBC와 홍신영 기자 등이 장 씨와 또다른 피해자에게 총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는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홍신영 기자와 관련 간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징계를 미루고 미루다 2024년 9월 6일 갑자기 홍신영 기자에게 근신 15일 그리고 방송 당시 데스크 차장과 팀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단돈 10원도 손해가 없는, 징계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솜방망이 처분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임기가 끝난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잔류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가 MBC를 영구히 장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북한 인권을 비판해온 장진성 작가에 대해 무리한 고발 보도를 하도록 상부에서 지시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한 가장을 파멸로 몰아도 그 피해자가 우파라면 MBC에서는 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MBC가 어떤 용도로 악용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특혜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제재받지 않은 죄악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언론노조가 정하는 비극을 막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indd 38-39 2024. 10. 22. 오전 11:01

2024
공정미디어연대 세미나

허위 정보 확산의 조력자로 나서는 방송... 원인과 대책은?

이홍렬 前) YTN 보도국장

1.indd 40-41 2024. 10. 22. 오전 11:01

허위 정보 확산의 조력자로 나서는 방송....원인과 대책은?

우선 발제자인 허만섭 교수님의 방대한 자료 분석(빅 카인즈, 언론중재위)에 감사 드립니다.
자료 분석의 양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한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발제문에서 국내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이 언론 책임이라는 응답이 56%라는 통계는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매체보다 영향력이 큰 방송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몇몇 방송 사례를 통해서 왜 허위 조작 방송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문제와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1. 광우병 광란과 그 주역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

8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2008년 당시 광우병 CP 조능희(방문진 이사 지원자)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허위가 아니었다.”,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발언.
당시 PD수첩은 미국 축산농장에서 몰래 찍은 주저앉은 소를 1분 넘게 보여주며 시작.
진행자는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는 “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희대의 오보를 날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공포에 질리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고 단 한 명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 았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촛불 집회 덕분에 광우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떠듭니다.
이 말이 맞으려면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먹는 나라에서는 광우병이 번져 난리가 났어야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방송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indd 42-43 2024. 10. 22. 오전 11:01

2. 후쿠시마 괴담 선동 조력자인 방송....나몰라라!

발제문에 “허위정보의 확산 구조에서 언론이 55%를 차지한다”는 통계 나옵니다.
선동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정치권에서 이걸 띄우고, 여기에 전문가나 유명인이 가세합니다.
이걸 다시 언론이 받아 씁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가세하고 언론이 연일 중계방송하듯이 방송합니다.
대표 사례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입니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목소리에 더 집중하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이미 국제기구인 (IAEA)에 의해 제시됐는데도 KBS와 MBC등 방송은 이를 무시한 채 정치권의 선동에 발을 맞춥니다.
이 허위 보도로 한국의 해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어민들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가짜뉴스에 상까지 얹어주는 기자협회

2020년 3월 MBC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는 MBC의 보도가 있고 석 달 만에 해고되고 한달 뒤 구속됩니다..
그리고 200일 동안 구치소 수감 되었다가 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구속될 당시 이동재 기자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이제 기자를 시작한 지 6년 차의 혈기 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잠시 이 사건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사건은 이동재 기자가 1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신라젠 이철씨 한테 편지를 보낸데서 시작합니다.
신라젠 회사 행사에 유시민 이사장이 참석해 극찬을 한 영상이 나돌았고, 정치권 로비 장부 얘기가 들렸습니다.
기자로서 로비의 실체를 알아내려는 특종 욕심이 났을 것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제보를 해주면 잘 보도하고, 검찰에 다시 이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검언유착 사건이 되는가?
“편지가 이철씨 변호인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의 로펌으로 들어갔고 편지 내용이 김어준씨를 거쳐 MBC에 제보됩니다.
그 뒤 이상한 사기꾼이 등장해서 이동재 기자한테 만나자고 연락하고 이 때 MBC의 몰래 카메라가 등장해 이들의 만남을 뉴스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검찰 고위 간부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만나 공모했다, 그리고 유시민씨 등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보도가 나옵니다.

그 뒤 이동재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고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휴대 전화를 뺏느니 못 뺏느니 하면서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장이 병원 입원 쇼까지 벌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요죄 구성 요건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후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맨 초기에 MBC 보도를 전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선동을 하려면 언론이 떠뜨리고 곧이어 정치권이 띄운다고 했습니다.
MBC 보도 당일 밤부터 최강욱씨는 유튜브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철씨에게 ‘유시민 이사장이나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 줬다고 얘기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편지에도 없고 한동훈의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열린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튿날 아침 KBS 라디오에 나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감찰 등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민단체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검찰에 이동재 기자를 고발한 민언련을 필두로 ‘서울의 소리’ ‘김용민 TV’ 같은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수백곳에서 매일 같이 허위 사실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대 정치 세력과 싸우는 광풍이 몰아친 격입니다

그것이 끝인가?
“민언련은 채널A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국민 청원을 벌입니다.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전 민언련 대표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이름의 언론 단체 수십 곳이 동아일보 사옥 앞으로 몰려와 채널A 재승인 취소하라는 집회 이어갑니다.

그 당시 오보에 KBS도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정권에 충성 경쟁하듯이 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총선 개입 공모를 한 녹취록 내용이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다 허위조작 정보이며 가짜뉴스 였습니다

그럼 이동재 기자의 무죄가 확정된 뒤 이른바 가해자들은 어떤 태도였는가?
MBC는 자신들이 먼저 검·언 유착이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최강욱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인격 살인’했던 유시민·김어준·민언련 등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납니다.

1.indd 44-45
2024. 10. 22. 오전 11:01

MBC 기자들이 이동재 기자 건으로 한국 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사기꾼'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오보였는데 한국 기자협회는 어ᄄᆞᆷ게 했을까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를 따졌을 뿐 무죄가 나던 상관없는 일이라고 얼굴을 바꿉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런 말을 한 걸 기사에서 봤습니다.
선거 공작과 날조를 일삼던 이들은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라디오를 진행하며 유튜브로 돈을 번다, '조작·선동 면허'를 가진 초법적 존재라도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4. 돈벌이 수단이 된 허위 조작 정보

슈퍼챗 순위

순위		채널	슈퍼챗 수입	슈퍼챗 개수
1 ^16	뉴탐사	뉴탐사 NewTamsa #더탐사 #탐사보도	+₩9,622,920	+306
2 v1		서태승	+₩8,874,561	+363
3 ^4		수와진TV #수와진 #7080	+₩8,752,759	+499
4 ^4	최현준TV	최현준TV #이재명 #윤석열	+₩6,864,125	+180

(순위 사이트 플레이보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더 탐사가 수퍼 챗 순위 1위입니다.
수퍼 챗 쏘는데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지난 주에만 960만 원, 대략 한 달이면 4천 만원 가량 수입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광고가 대략 4-7천 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고정 자막 후원금도 받습니다.
한달 수억 원이 수익이 나옵니다.
김의겸은 당시 후원금 1억 5천 만 원 순식간에 채웠다고 합니다.

가로세로연구소도 마찬가집니다
강용석 변호사 4년전 문재인 명예훼손 경찰 체포 당시 긴급체포 현장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2천 3백만 원 수퍼 챗 신기록 세웠습니다.

극단주의자 (유튜브)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고, 정치인이 올라타 부추기고, 확증편향의 묻지마 소비자들은 돈을 냅니다.

그렇다보니 MSG가 더 듬뿍 들어간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5.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한계

유튜브에서 아무리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도 어떤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을 통해 명예훼손 처벌을 요구하거나 법원을 통한 손해 배상 뿐입니다.
말이 그렇지 웬만한 사람은 피해를 봐도 여기에 매달리기 쉽지 않습니다.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제재를 합니다.
문제는 심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봄에 한 방송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22년 12월 종방이 됐는데 다음해인 2023년 9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사무처의 일손이 달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심의 안건을 분류하고 의견서 작성하고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력 , 예산 문제인데 일부에선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물론 유희림 위원장 체제에 들어온 뒤로는 신속 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예외적으로 빠른 심의도 하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방심위 제제를 무효화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방심위 결정을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2인 체제인데도 의결 정족수만 문제삼은 정치 판결이란 지적이 나올 만도 합니다.

6. 저 비용 고 효율 구조

김대업 병풍 조작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11% 끌어내린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엄청난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김대업은 고작 1년 9개월 살고 가석방 됐습니다
KBS는 이 뉴스를 9시에 무려 80차례 다뤘습니다(2006년 KBS 감사결과)

1.indd 46-47 2024. 10. 22. 오전 11:01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방송, 제작진 전원 무죄입니다. MBC 내부 징계 없습니다.
나경원 억대 피부과 이용 보도, 오세훈 생태탕 보도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 사과나 담당자에게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선거는 승리했고 징계는 없다"
특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에서는 이런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 높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7. 정치 도구화 & SNS 플랫폼 비대화

허만섭 교수님 지적 하신대로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과도한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플랫폼이 나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했을 때 플랫폼 권한의 비대화가 논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드러난 보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메겨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개인이나 집단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도할 때 더욱 신중하게 사실 검증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자 뿐 아니라 유통자도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끝)

2024
공정미디어연대 세미나

허위, 조작정보 해외 사례 중심으로

김문환 박사 · 前) 고려대 연구교수

1.indd 48-49 2024. 10. 22. 오전 11:01

허위, 조작정보 해외 사례 중심으로

1. ‘허위 조작 정보’ 정의

발제자 허만섭 교수님은 “허위정보(Mis-information)-실수로 빚어진 사실과 다른 오보”와 “허위조작 정보(Dis-information)- 속이려는 의도로 만든 거짓 정보. 가짜 뉴스라는 용어보다 허위조작 정보가 더 적합하고 가짜뉴스는 그 일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동의하면서 추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가짜뉴스 정의를 보면 “정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왜곡해 퍼트리는 정보(Dis-information)”라고 정의합니다. 발제교수님의 허위조작정보 기준은 1개입니다. ‘고의로 만든 허위정보’. 방통위 기준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정보”입니다. 법률용어로 비유하면 ‘미필적 고의’에 견줄 수 있습니다. 고의로 허위를 보도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음에도 즉,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실이겠지’라고 믿으며 보도하는 경우입니다. 진실 확인 취재과정이라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회피한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 관련자의 제보나 증언에 근거합니다. 제보나 증언이라는 단순한 사실(Fact)은 진실(Reality)인지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뉴스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진실확인과정을 생략한 채, 책임을 증언자에 떠넘기면서 진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조작 정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 ‘허위 조작 정보’ 폐해

1)공론장 무력화, 민주주의 훼손

발제자 허만섭 교수님은 ‘허위조작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트리며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라는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정의하셨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리프만(1922)은 “미디어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전통

1.indd 50-51 2024. 10. 22. 오전 11:01

사회와 달리 현대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정보를 사람이 아닌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미디어와 뉴스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하버마스(1961)가 설파한 대로 유무형의 '공론장'에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런 과정에 여론이 형성됩니다. 공론장에 정보를 공급하는 핵심 통로는 TV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방송의 '허위조작 정보'로 오염된 대중의 판단은 공론장에서 그릇된 여론을 형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인 공론장이 무력화되고, 조작과 선동이 난무하는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사회로 갑니다.

달그렌(2005)은 "TV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공론장에서 핵심가치들을 전하고 민주주의라는 신체에 혈액을 공급한다"고 설파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로 오염된 혈액을 민주주의라는 신체에 강제 주사한다면 건강한 사회발전과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책임질 민주주의가 후퇴합니다.

2) 방송, 정치인의 가짜 진실 확대재생산

발제자 허만섭 교수님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치분야 '허위조작 정보'가 많다고 답했다" 면서 "결론적으로 국내 가짜뉴스 이슈는 대통령 등 정치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1년 6월 9일 한국일보는 창간 67주년 기념으로 워싱턴 포스트 전 편집국장 마틴 배런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스포트라이트' 속 실제 모델인 그는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뒤로 편집국장을 맡아 2013년부터 8년간 다수의 퓰리처상을 받고, 기자 수도 580명에서 1,000여 명으로 늘린 장본입니다. 마틴 배런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에게 진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송의 데일리 뉴스나 하루 종일 쏟아내는 생방송 대담뉴스의 대부분은 정치인이나 정치 평론가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틴 배런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자신들에게 이익일 뿐인 주장. 진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방송사 스스로 판을 깔아주며 전합니다. 정치 과잉 시대 미필적 고의의 '허위조작방송'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해외 허위조작 방송 규제실태

유럽에서는 2015년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 협의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러시아의 '허위조작 정보' 캠페인 문제를 다룰 '동부지역 전략커뮤니케이션 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섭니다(김민정, 2019).

1) 유럽연합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1월 고위전문가그룹(HLEG)을 소집해 논의를 거친 끝에 3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고위전문가그룹은 이 보고서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합니다(김민정, 2019).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어 4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관한 정책안: 유럽의 접근법〉, 9월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 12월 〈허위조작정보 대응 행동계획〉, 2019년 6월 〈허위조작정보 대응 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허위조작정보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합니다.

2)프랑스

프랑스는 2018년 12월 [정보조작 근절법(대처법)]을 마련해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허위정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보다 더욱 신속하게 허위조작 정보를 퇴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강력한 사법 조치입니다.

3) 독일

독일은 2015년 연방법무부를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불법정보 문제를 다루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형법의 범주로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을 마련해 허위정보뿐 아니라 혐오 표현과 모욕, 아동포르노 등 불법 방송물에 대한 사업자의 콘텐츠 감시 감독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청소년 미디어 보호위원회(KJM), 각 방송사별로 방송위원회를 두고 규제도 펼칩니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3)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허위정보 관련해 1.투명성, 2.저널리즘 기본원칙(중립적 균형성) 준수, 3.조작이나 선동성 여부로 뉴스나 정보를 판단합니다. 중립성은 한국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균형성 심의 조항과 유사합니다.

4) 영국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격인 오프콤(Ofcom)이 '허위조작 정보' 문제를 다룹니다. 영국 문화부는 2024년 1월 오프콤이 공영 BBC의 일반 뉴스 외에 디지털 뉴스(인터넷 뉴스)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미국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의도적인 왜곡정보를 보도하는 방송 뉴스에 제재를 가합니다.

서구 선진국에도 이처럼 '허위조작 정보'르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규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면 잘 나오지 않을까요.

1.indd 52-53 2024. 10. 22. 오전 11:01

4. 해외 사례 연구의 개선방향

1) 정부의 외국 법제나 규제 사례 연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9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OECD 주요국가의 관련 사례 정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는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 방안-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불법·유해 정보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다는 취지입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도 2023년 6~7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을 찾아 '허위조작 정보' 규제 등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 선진국 방송, 불공정 허위 조작 보도 거의 없어

정부의 '허위조작 정보' 대응 초점은 외국의 규제 시스템이나 법제를 연구하는데 모아집니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자칫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는 대국민 영향력이나 신뢰도가 큰 일부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 있습니다.

이 방송사들이 '허위 조작정보'를 방송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에 앞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 방송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철학과 보도 관행, 실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3) 선진국 방송 공정, 진실 보도 실상부터 연구 홍보해야

▲ 영국의 공영방송 BBC(국영기업)나 민영 ITV(비영리 법인, 1955),

▲ 프랑스의 공영방송(100% 정부출자, 국영기업, 수신료와 광고 운영) France TV의 F2, F3, F4, F5, 프랑스 엥포 6개 채널. 그리고 민영 TF1(미테랑 사회당 정부 때 시라크 총리가 1935년 설립된 공영 F1을 민영화).

▲독일 공영 1채널 ARD, 독일 공영 2채널 ZDF

위 어느 방송사도 한국의 현재 일부 공민영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서 진행하는 정쟁 위주, 특정 진영편향의 정치뉴스(정책 중심이 아닌 정쟁 중심 발언)를 방송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선진국은 '허위조작 정보' 관련해 뉴스를 규제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방송에 무한 표현의 자유를 줘서가 아닙니다. 방송사 자체에서 불공정 '허위조작 정보'를 뉴스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규제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방송 스스로 불공정 '허위조작 정보' 보도에서 거리를 두는 공정보도 실상부터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허위조작 정보' 없는 방송이나 공정한 뉴스가 어떤 것인지 대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알리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2024
공정미디어연대 세미나

법적 규제 및 처벌 규정 마련

김희원 변호사 · 경제사회변호사회

1.indd 54-55 2024. 10. 22. 오전 11:0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대응 방안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

□ 서 론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대표적으로 유튜브)이 가짜뉴스 유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 언론 관련 분쟁조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유튜브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현황

최근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이버렉카'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사이버렉카'는 교통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달려오는 '렉카' 차량처럼 조회수가 되는 현안이 생기면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을 뜻하는 표현이다.

정치, 사회, 연예, 경제 등 분야를 막론하고 대중이 클릭할 만한, 조회수가 나올 만한 이슈에 주목하다 보니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따지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는 등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될 경우 당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파급도 상당하며, 2023년 美 국방부 공격 이미지 딥페이크 제작 유포하여 세계 증시가 출렁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

□ 유튜브의 법적 지위

「언론중재법」 제2조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방송"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

1.indd 56-57
2024. 10. 22. 오전 11:01

행물을 말한다. 언론중재법, 방송법, 신문법 등 현행법률에 의하면 유튜브 영상은 엄격한 의미의 방송 또는 언론에 속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현행 제도 하에 방송, 언론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기구들은 대체로 방송, 언론, 신문에 한하고 있어 유튜브 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일자,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성 언론사가 본 매체에 게재된 콘텐츠를 자사 유튜브 채널에 동일하게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부 운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유튜브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이 정식 보도로 볼 수 있는 정도여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유튜브 방송의 적용 법규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64호, 2024. 7. 19.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된다.

□ 개선 방안

유튜브 방송의 가짜 뉴스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명예훼손과 관련한 권리침해로 귀결된다.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설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현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는 있지만, 가짜뉴스가 범람한느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분쟁조정 전담기관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 사무를 효율화함으로써 명예권 등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관련 법령 체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10에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의 회의 소집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 지명, 회의 비공개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

즉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는 시행령 내지 내부규칙의 정비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률의 개정을 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개선안 상세

△ 전담조정부 설치

신속한 조정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1인 이상 3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담조정부를 설치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은 전담조정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조정부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등 추천권 명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전담조정부의 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과 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전담조정부의 관계를 정립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역할 강화에 기여한다.

△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전담조정부 설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속한 전담조정부로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전담조정부' 설치해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유사 언론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문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한다.

△ 당사자 출석 보장과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

전담조정부의 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즉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을 명시해 당사자(혹은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정 처리를 명시해 신속한 조정절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제도화하고 조정기일 3일 전까지 전담조정부의 장 일시·장소 및 조정에 회부된 사건자료를 조정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해 조정기일 심리의 충실화를 실현한다.

1.indd 58-59 2024. 10. 22. 오전 11:0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의의 임시조치 권고제도 도입

조정기일 전 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해 신청인의 피해확대를 방지한다. 또한 전담조정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 권고안 제시권을 부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담조정부의 제시안에 대한 권고 여부를 제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해 권리침해 피해자인 신청인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조정절차의 비공개 및 조서작성

권리침해 피해자인 신청인의 보호를 위해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명시하고, 당사자,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의 경우에만 조정기일에 전담조정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서작성의무 명시해 조정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다.

△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조정절차의 실질화를 위하여 조정 불성립시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 조정 불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전담조정부가 위원회에 직권조정결정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양 당사자가 해당 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 불법정보 심의 요청 제도 도입

조정대상 콘텐츠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조정부의 장이 법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조정대상 콘텐츠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게시의 권고

조정의 성립·불성립과 위원회의 결정 등의 정보를 게시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담조정부 조사관 및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장의 업무지원 요청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조정사무의 효율적 진행과 분쟁당사자의 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해 전담조정부에 1인 이상의 조사관 배치를 명문화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장에게 업무지원 요청권을 부여한다.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규칙제개정 관련 협의권을 명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 사이의 협의권을 명시해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의 왜곡을 최소화한다.

1.indd 60 2024. 10. 22. 오전 11:01